

# 4·5 전주를 재선거 과열 양상

### 전과·색깔론·욕설 등 비방 난무... 공약검증보다 네거티브 형태로 전개 우려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가 8일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보들의 공약검증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겨냥해 이념 공격을 펼쳤다.

임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을 이어가는 운동권 정당으로 자칫 전주가 반미 구호로 가득찬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위대하고 현명한 전주

사람들은 반미투쟁에 내설 운동권 정당이 아닌, 전주 발전을 위해 준비된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대적 청렴이 아니라 절대적인 도덕성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 중 50%인 3명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후보들의 도덕성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한 후보는 4차례에 걸쳐 전과 5범이라는 전과자가 됐고 또 다른 후보는 앞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후보 역시 업무상횡령 및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하고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강성희 후보와 임정엽 후보를 겨냥했다.

장외전도 치열해 기호 2번 김경민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 측은 진보당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며 네거티브 전을 본격화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에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의 충돌도 있었다.

이날 강 후보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

소 앞에서 집중유세를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김 후보 측이 강 후보 측에 항의하자 선거운동원은 김 후보 측에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후 강 후보가 유세처장에서 김 후보를 향해 '철새 정치인'이라고 발언하자 김 후보 측은 다시 '하위사실'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번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따른 것이다.

재선거에는 임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무소속 안해욱, 무소속 김호서 후보 등 6명이 출마했다. /뉴시스



최형열 도의원, 효자1동 찾아 기반시설 노후화 등 민원 청취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효자동을 찾아 전북도 및 전주시 관계 공무원, 관공서, 전주시의원, 주민 등과 함께 간담회 및 합동점검을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최형열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들의 대부분은 효자동에 오랫동안 거주해 오신 분인데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래에도 이곳에서 살아가 수 있도록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대표는 "쓰레기장 비가림시설 등의 환경정비의 필요성과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재가 방문요양서비스의 시간 확대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관공서 전 전주시의원은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이 낡고 오작동 시설이 많아 이용이 불가하며 설치공간이 지하에 있어 습기로 인해 노인들의 보행에 위험성이 높아 응급상황 발생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열 의원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노인복지정책 보완 및 주민의 안전과 환경개선 등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적용되는 정책으로 구현되어 효자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는 예비군들. 코로나19로 중단 및 축소되었던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 시행된 28일 남원예비군훈련장에서 마일즈 정비를 착용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읍·고창 애당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확정'

### 민주 윤준병 의원, 배수개선 예산 97억원도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정읍·고창 지역 7개 지구(△정읍: 유정·평령·석우·용흥·백운3지구(신규착수), △고창: 고창·강남지구)에 올해 배수개선 예산 97억원(총사업비 8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 신규 기본조사 지구로는 정읍 평령2지구(추정사업비 99억원), 고창 해룡지구(추정사업비 69억원), 고창 신흥지구(추정사업비 80억원) 등 3곳이 지정돼 기본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후 사업비가 확정된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정읍·고창 애당지구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정읍 정읍 하류 물 부족과 흥덕제 인근 애당리 등 지역의 고질적 물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애당지구에 국비 222억원이 투입되어 지선제 용수보장 및 인근 소규모 저수지를 통합 재편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배수개선 사업과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은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필수 사업이다"며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정읍·고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자체 및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 무주 무풍면 배수개선사업 국비 50억 확보

### 민주 안호영 의원 "상습 침수피해로 고통받던 주민 숙원 해결"



무주군 무풍면(무풍지구)이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안주·진안·무주·장수군)은 무주군 무풍면(무풍지구)이 2023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전액국비지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보는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위치는 무주군 무풍면 철무리, 증산리, 은산리 일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상습 침수피해로 고통받아왔던 무풍면 농민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해 왔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도와 농림부, 기재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무풍면 배수개선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쏟아왔다.

사업은 올해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내년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무풍면 수해 상습 농지 52ha에 걸쳐 농작물 침수가 예방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무풍면은 배수로 좁아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아 상습적 침수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지역주민들의 숙원 과제인 침수피해 해결을 위해 국비 50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동안 상습 침수피해로 고통받아왔던 무풍면 농민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검찰, 군산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 지선 과징서 금품 살포 혐의... 5월 11일 선고 공판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범정에 세운 김입준(88) 군산시장에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진행된 강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강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추징금 등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관부터 범정에까지 강입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김종식의 진술, 공범들은 김종식을 회유하기 위해 수시로 연락을 취했고 강입준을 다수 언급하는 등 개입한 정황 다수 확인된다"며 "서지만 등이 김종식에 제안한 이익제공 등은 강입준의 개입 없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금품수수가 인

정된다"고 했다.

이에 강시장 측 변호인은 "현금제 공과 관련해서 보면 김종식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진술밖에 없는데 (금품을 받은) 김종식은 진술을 많이 바꾸고 있다. 이익제공 의사표시도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임에도 서지만 등 사이에서 오간 내용들이 증거가 되어서 강입준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억울한 면도 있고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성찰하고 더욱 조심하고 노력하며 살겠다.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강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전주매일 캠페인